

(2005~2026(예상치) 법인세 최고세율 정리)

기간	과세표준	세율	정부
2005~2007	1억 초과	25	노무현
2008	2억 초과	25	노무현~이명박
2009~2011	2억 초과	22	이명박
2012~2014	200억 초과	22	이명박~박근혜
2015~2017	3000억 초과	22	박근혜
2018~2022	3000억 초과	25	문재인
2023~2025	3000억 초과	24	윤석열
2026	3000억 초과	25(예상)	이재명

단위: 원·%

‘법인세 인상’ 도마 위 재정안정 vs 기업부담

(정부·여당)

(야당)

2025 세제개편안

국회 예결위 조세소위원회 앞뒤
정부, 법인세율 2022년 수준 예고
“인상 필요성·한계 등 검토 필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여당과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해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이다. 법인세는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정부는 과세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차려지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尹 3년 간 세입기반 약화·조세부담률 약화

윤석열 정부 초반 ‘Y노믹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 바 있다.

2022년 103조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덜 걷히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국제수입 기반이 악화되고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급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법인세는 총조세 대비 비중이 2023년 14.4%로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주요 세목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 기조를 보이는 이재명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잘하는 기업에 더 부담 주는 법인세?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과 한미관세협상 등 국내 수출 기업의 상황이 녹

록치 않은 가운데,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또는 G7 국가에 비해 GDP(국내총생산)이나 총조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또는 G7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또한 26.4%로 OECD 회원국 평균 23.9%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다.

법인세는 과세 기간 동안 순자산이 증가한 법인을 상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통계연보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 : 2023년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약 100곳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이 법인세의 38%를 납부했다. 범위를 소득금액 500억원 초과 법인으로 넓히면 1000개의 기업이 총 법인세의 64.0%를 부담을 납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부위원회 야당 간사는 전날(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더 주는 형국”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많은 투자와 세금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기업들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제수입 전망에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 인상 등의 효과를 고려해 법인세가 87조5000억원 견힐 것이라고 봤다. 2025년 예정치 법인세 수입 예측치 83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감소하고 법인의 세부담은 6조2075억원 증가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법인세 찬성 측은 재정 확충과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 증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정확충 효과가 제한적이고 세율 인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우려를 들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빚투·영끌’ 등 부채 급증.. 부실 우려 목소리 커져

주식·부동산 시장 중심 머니무브
은행, 일주일새 신용대출잔액 1조 ↑

“와이프의 불면 소리가 갈수록 커집니다.우리만 ‘벼락거지’ 되는 것 아니냐고. 뭐라도 빨리 사라지고요. 불장입니다 불장.”(직장인 김모씨·43)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기대감 속에 코스피 지수가 11일 4100선까지 훌쩍 넘어선 가운데, 이 대열에 동참하려는 개미들 사이에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사는 부동산 ‘영끌’ 수요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빚투·영끌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은행 가계신용대출 급증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월까지 증가 폭만으로 지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은행 마통만이 아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7월 26조2165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0조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잔고액은 지난 5일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빚투족’이 급증한 것은 코스피 영향이 크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흔들리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대를 넘어섰으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인다.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경고의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주택대출 세액공제, 공공금융기관 주택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차입을 통한 주택구매가 늘었지만,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2000년대 들어 부채 상황(디레버리징)이 이뤄지면서 가계소비는 장기간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사, 내년 코스피 상단 ‘4500~7500’ 제시

낙관론-신중론 맞서며 상단 편차 커져

올해 코스피가 조정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맞서며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최고치를 7500포인트로 제시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현재는 1984년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시기

와 유사한 국면”이라며 “이번 강세장은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닌 40년 만의 장기 상승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KB증권은 반도체 업종의 공급 부족에 따른 호실적이 지속되면서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 또한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단을 4500포인트로 제시하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최고치를 4600포인트로 제시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5000포인트를 전망했다.

증권사별 전망치 편차가 벌어지면서 투자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증권사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내년, 수출둔화·내수회복 경향 보일 것”

》1면 ‘韓 올해 0.9%’서 계속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수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상 갈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미국발 상호관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GDP 증가율의 관건은 1% 선이었다. 지난달 하순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올해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달 7일(현지시간) 한국 전망치를 종전 대비 0.1%p 올린 1.0%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보고서에서 1.0%를 예측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 1.8% 전망치를 제시했다. 종전의 1.6%에서 0.2%p 상향 조정한 수치다.

보고서에서 “2026년 우리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1.3%)보다 높은 증가폭(1.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통상협정 세 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 등에 따라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민세 기자 kys@